

데스크 시국



김대성 제2사회부장

"해를 건 다해봤는데, 정말이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다. 이와중에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꾸러져 있는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위원 등이 참석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투자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실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최근 열린 이날 회의는 전남 서남권의 한 군이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주한 용역 시행 기관의 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들 만연

하지만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의 얼굴빛은 밝지 않았다. 전문가의 용역 결과 제시된 안이 현금성 지원 등에 전과 다를 바 없었고, 획기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 각종 정책이 남발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갈 길 이 멀었다는 증명이자.

지난 2012년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해남군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7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완도

은편칼럼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사무실 정문 계시대애 '광주는 독서 중, 다시 책으로'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다. 시교유형에서는 독서교육 내실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독서회를 활성화시키고, 1교 1독서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마다 특색있게 진행하고 있다.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 책 읽기 운동은 미국 시카고를 변화시켰다. 영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도 확산된 북스타트 운동은 채 한 살도 되기 전부터 책을 장난감처럼 만지게 해서 평생 습관이 되도록 책꾸러미를 전달한다. 독서는 개인 취향을 넘어 사회문화 차원에서 인식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출발점으로도 생각하여 다양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향 광주도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건 것이다. 출퇴근 때 이 플래카드를 보면 두 분이 떠오른다.

예전에 독서교육 업무를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300여 명의 학부모독서회장단 연수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싶었다. 황세화 작가와 최재천 교

기 고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치, 행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한 지역 여론형성에 기여했다. 접근성에서도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밀착되었다. 단순한 정보나 바른 사실의 전달과 제공을 넘어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높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 지역의 현안을 뉴스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도 해왔었다. 지금의 지역언론은 어떤가? 지역과 지방이 소멸의 길로 들어서면서 지역언론도 생사의 갈림길 위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는 재정 열악과 인력부족 등으로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역신문은 디지털 미디어 확대와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뉴스가 유통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은 더욱더 심화되었다. 결과는 기사 노출 감소에 따라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등 지역언론이 직면한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에는 지역매체가 담당하고 있는 순기능이 사라지고 지역민의 알 권리 또한 훼손될 수 있다. 현재 지역언론의 어려움은 당면한 인구감소와 지방

구태의연한 인구 감소 대책은 가라

군과 광양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미진하기였다. 이처럼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일자리와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응했지만 그다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일개 지자체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급기야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특별기금으로 마련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선 것인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금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최근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사업에 적용될 운용 방안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업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방문인구 유입에 맞춰져 있거나 소프트웨어보다 대규모 토목 사업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 역시 지난 2년간 3000여 명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추진한 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문화·관광 사업에 치중돼있는 반면 교통과 의료 등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편향된 정책이 정부의 예산 책정 기준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상황과도 괴리된다. 예이다. 현금성 지원과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만으로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산업화 정책에 소외돼 교통과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아무리 매력적인 정책이라도 SOC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일 예산액을 지출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SOC 인프라 확충 등 근원적 처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도 나왔다. 출산지원금 지급 등 기금 사업에 한하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공허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 공허한 정책에도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지자체의 책무다. 정부의 기조가 바뀐 만큼 이를 잘 파악해 획기적인 전략으로 인구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당장 인구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여전히 대부분 사업이 정주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방문인구 유입에 맞춰져 있는 정책에 제동을 건 상태인 데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성과 분석과 집행 실적의 비중을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장려금 지원과 방문인구 유입 등 1차원적 정책보다는 산업과 주거 등 SOC 인프라를 확충,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때이다.

책 읽는 광주

수였다. 황세화 작가는 파리에서 택시를 몰며 떠돌던 이방인이었는데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를 통해 프랑스의 '플레랑스(관용)' 문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싫어하지만, 당신을 싫어하지 않겠다", 잔디밭 들어가서 말라는 경우 대신 "(잔디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남들이, 잔디가 당신을) 존중하게 하시오"라는 공원 잔디밭의 꽃말 등을 관용의 예로 들었다. 당시 20여 년 만에 귀국하여 한강과 세느강을 건너 들며 바쁘게 활동하였다. 그는 지난해 한겨레 칼럼에 '마지막 당부: 소우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란 절필의 글을 썼다. 그리고 지난 4월 세상을 떠났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이명준이 남도 북도 거부하고 제3지대로 향했다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유신의 반체제 인사였고, 관용의 휴머니스트였지만 일부 진보층의 비난도 받았던 그는 경계 인처럼 살다 갔다. 최재천 교수는 저녁 7시까지 서울 집에 도착한다는 조건이었다. 저녁 7시 이후의 가사와 아이 돌봄은 자신의 몫이었다. 서울대 회식문화를 점심시간으로 바꾼 장본인이다. 암컷 우위의 동물 세계를 소개하면서 '여성 시대에는 남성도 화장을 한다' 등의 책을 펴내고, 수백 년 호주제를 폐지한 행동하는 학자였다. 남성에게는 가부장적 집을 벗기고, 여성에게는 편견의 굴레를 깨뜨린 공적으로 남성 최초 여성운동상을 받았다. 독서광 최재천 교수는 인생 곡절마다 책과 만남이 있

었다. 한 인간에게 한 편의 토막글이,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절절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자연과 놀이, 독서로 정리된 그의 일생을 보면 동물생태학자가 아니라 독서생태학자 같다. 초등학교 때 교과서 외에 처음 접한 책 '동아백과사전'은 너털너털 해지도록, 어머니가 월부로 사주신 '세계동화전집'은 수없이 읽고 또 읽고, 중학교 때는 역시 월부로 구입한 '한국단편문학전집'을 시작으로 소설에 파묘형 성격은 바닥이었다. 이어 고교에서는 '노오벨상문학전집'으로 다른 나라 이야기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미국 유학 시절에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교수들이 대단한 논문이라며 바로 박사학위를 준다고 했으나 안 받았다고 끝까지 거부했고, 요즘은 모두가 걱정인 인구 문제도 "출산율이 회복 안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통섭의 꼬리이다. "아기바구니에 담겨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눈에 늘 책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 부부가 가장 잘한 교육이었다. TV 그고 엄마 아빠 책 읽으면 아들딸도 읽어요." 특강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광주의 학교에 364-스터디룸이 늘여가고 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최적의 학습 공간이다. 여기에 '365-한 장 읽기' 독서운동을 제안해 본다. 광주의 모든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이 머무는 공간에 책을 비치하여 책 읽는 광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이든 성인이든 습관만 들이면 책은 읽게 된다. 아니 말려도 읽는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

소멸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역 뉴스의 소외는 뉴스 소비자들이 지역민들의 뉴스 선택권은 물론 지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정부도 지역매체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목표 없이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

문제의 심각성은 중앙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을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각이다. 이는 역대 정부를 거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고착되었다. 바로 이런 고질적인 문제의 영향으로 지금은 지방에 대한 소통과 상생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경험이다. 매일 아침 일찍 전날 발생한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해서 발표하는 회의가 있었다. 주로 외교, 국방, 정치, 국내·외 현안 등 중앙에 관련된 내용과 중앙언론의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매일 해당 부처에서 올라오는 이슈와 뉴스 모니터링 보고 내용 또한 그렇다. 아마도 이전 정부들 때부터 오랜 동안 그래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회의는 매일 담당행정관들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다. 필자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날에는 중앙의 소식과 함께 지역언론의 이슈와 뉴스도 비중을 두고 비교하며 다뤘다.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시도이자 도전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한

반응들을 보였지만 여러 날 횡수가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당시 경험을 통해 느꼈던 생각을 내부 회의와 발표로 사례로 들었다. 중앙 정부와 언론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도해보거나 실행해보지 않아서 문제였다. 만약 고강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면 지금의 지방과 지역언론에 대한 중앙의 잘못된 인식과 시각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SOC 인프라 확충 등 근원적 처방을

지역과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은 산다고 한다. 그렇다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의 연속이다. 지역과 지방의 위기는 지역언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지역언론은 포털사이트 증가 등 디지털 미디어 확대와 경영악화로 현재 위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 보듯 뻔하다. 앞으로도 지방과 지역언론은 모두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언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나아가 방향은 무엇인가? 향후,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언론 스스로 정부의 지원 정책 외에 자생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지속 가능성이 약하다는 지역언론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끝으로 중앙 정부와 정치권 역시 지방과 지역언론에 대한 인식과 시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社說

보행 중심 도로정책, 시민 합의가 우선이다

광주시가 수십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교통 정책을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교통 정책으로 전환했다. 도로 교통 정책의 기준을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교통 선진국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다. 급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했지만, 점차 선진 도시들은 쾌적한 도시를 위해 차량의 도심 통행을 줄이는 대신 보도 확충 등을 통해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다만 광주시의 현재 도로 여건상 자동차 도로를 줄이는 방식은 자칫 교통난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추진 대상 지역이 제한적인 시범 사업의 성격이어서 찬성측 논리로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최근 자동차 이용이 불편한 도시를 만들어 '2045 탄소중립도시'로 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차로 수를 줄이거나 차로 폭을 좁혀 자동차 이용이 더 이상 편리한 교통 수단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동시에, '대·자·보 도시'

호남권 메가시티로 지역소멸 해법 찾아야

7년만에 이뤄지는 광주시장·전남지사·전북지사 등 호남권 3개 광역단체장의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광역단체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일 전북 정읍에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공동 관심사인 인구감소지 원범에 따른 특례 조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국가출산수당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남권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초광역 교통망과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메가시티는 지역소멸 극복 대안으로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로부터 '충

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대·자·보 도시'는 먼저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규정한 간선급행버스체계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이 자동차보다 편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하고, 보행로를 넓히는 교통 환경 도시를 말한다.

문제는 '대·자·보' 교통체계를 우선 도입할 구간이 현재 공사중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7.06km 도로라는 점이다. 이 구간은 시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으로 이어지는 도심 간선도로로, 대형 교차로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곳이어서 주민들은 물론 회사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보다 보행자와 대중교통·자전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교통체계가 선진국형임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다만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치장정부연합' 설치를 승인 받고 오는 12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울산·경남도 민선 8기 들어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것은 타 지역에 주도권을 내줄 경우 지역소멸이 가속화 될 것인 큰 위기기 때문이다. 메가시티가 이뤄지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에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호남권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 초광역 생활 및 경제권이 형성돼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공의 전제 조건은 수도권에 쫓겨가는 육신을 버리고 양보와 타협속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4년 결성돼 2017년까지 11번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7년만의 만남인 만큼 육신을 버리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마음으로 회동에 임하길 바란다.

無等鼓

꽃이 핀 걸 발견 할 때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보려는 식집사(식물+집사)의 책임감도 더해진다.

오가며 행운과 행복을 발견한 동료들에게도 행운과 행복이 나눠졌다. 무심코 지나치면 모를 꽃이지만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에게는 보였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꽃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잠깐의 시간조차 감사하다. 식물이 주는 나비효과.

반면 오랫동안 관심 밖에서 벗어나 죽어나가는 화분들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내다 버리는 이들의 마음에 과연 일말의 슬픔이나 죄책감이 있었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

식집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식물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받은 성공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죽어나가고 살아나는 식물들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다.

누구라도 반려식물 하나쯤 키워보는 걸 추천한다. 다만, 식물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식집사가 되어주기를. 반려식물에게서 받는 위안과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올테니.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반려식물 나비효과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있다. 공기정화, 인테리어 등을 위해 식물을 기르던 것을 넘어 식물과 교감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1인 가구와 노령층 인구가 늘면서 반려식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삶에 활력을 얻고자 반려식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사무실에 종종 화분이 들어오곤 한다. 축하용 선물로 식물만한 게 없나 보다. 난 종류는 동료 직원들의 책상 위에, 부피가 큰 나무를 잡는다. 이 공용공간의 나무들이나의반려식물이

사무실에 종종 화분이 들어오곤 한다. 축하용 선물로 식물만한 게 없나 보다. 난 종류는 동료 직원들의 책상 위에, 부피가 큰 나무를 잡는다. 이 공용공간의 나무들이나의반려식물이

사무실에 종종 화분이 들어오곤 한다. 축하용 선물로 식물만한 게 없나 보다. 난 종류는 동료 직원들의 책상 위에, 부피가 큰 나무를 잡는다. 이 공용공간의 나무들이나의반려식물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